

이슈브리프

ISSUE BRIEF

발행일 2018년 06월 08일

| 금주의 이슈 |

- I. “최저임금인상 긍정효과 90%” 자영업자 · 실직자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 / 3
- II.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 중단과 시사점 / 9
- III. 라돈 공포의 확산, 무엇이 문제인가 / 15



금주의 이슈

- 금주(6월 첫째 주)는 경제 분야 및 사회 분야에 관한 3편의 이슈를 다루었습니다.
제1편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양극화가 개선”되었다는 최지의 文대통령 발언을 둘러싼 논란을 조명했으며, 제2편에서는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 중단과 시장논리를 무시한 文정부의 정책추진의 문제점을 다루었습니다. 이어 제3편에서는 국민적 불안을 확산시키고 있는 라돈침대 사태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 제1편 : “최저임금인상 긍정효과 90%” 자영업자 · 실직자는 대한민국국민이 아닌가? | 이종인 수석연구위원 |
文대통령의 왜곡된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효과 및 양극화 개선” 발언과 이를 뒷받침한 청와대 경제 수석의 아전인수식 통계 재가공으로 인한 논란이 점입가경입니다. 서민을 위한다는 文정부가 생계형 자영업자와 실업자들을 제외하고, 최저임금정책으로 소득분배가 개선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최저임금 급격한상 등 거꾸로 가는 정책을 하루빨리 버리고,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이 추진되기를 기대합니다.
- 제2편 :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 중단과 시사점 | 김창배 연구위원 |
지난 5월 21일, 현대차그룹은 주주총회를 취소하고 3월 이후 추진 중인 지배구조개편안을 철회했습니다. 시장논리를 무시한 文 정부의 재벌개혁이 만들어 낸 참사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으며, 우리 기업들의 경영권 방어수단 강화 및 확보가 얼마나 시급한지도 반증하고 있습니다. 이글에서는 동 쟁점에서 얻을 수 있는 몇가지 시사점을 제시하고,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등 바람직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제3편 : 라돈 공포의 확산, 무엇이 문제인가 | 장경수 선임연구위원 |
이글에서는 최근에 국민적 불안과 분노를 확산시키고 있는 라돈 침대 사태의 현상을 살펴보고 관련된 주요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성제고를 위한 강력한 정부대책을 촉구하는 등 여러 정책적 측면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2018. 6. 8

여의도연구원 원장 김 대 식

1. “최저임금인상 긍정효과 90%” 자영업자·실직자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

작성: 이종인 수석연구위원 ☎02-6288-05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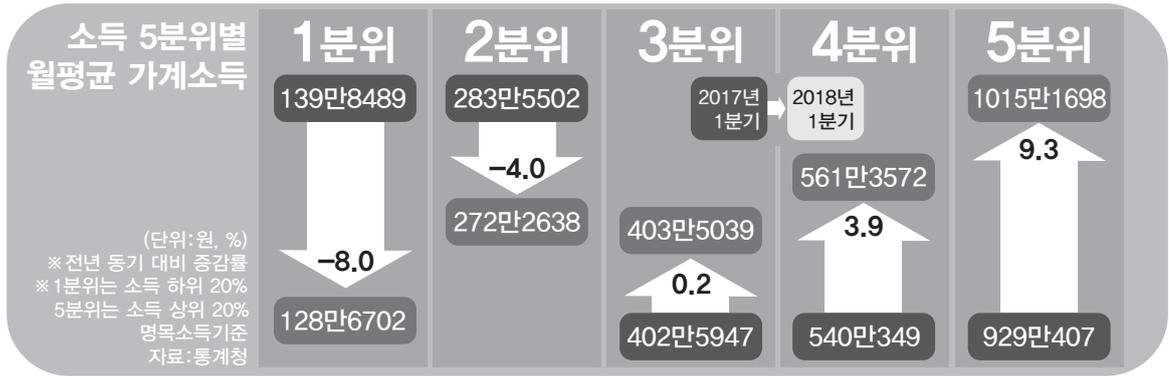
文대통령의 “최저임금 인상의 90% 긍정효과 및 양극화 개선” 발언 및 이를 뒷받침한 BH의 ‘조작’수준의 我田引水식 통계 재가공으로 인한 논란이 一波萬波 커지고 있음. 서민을 위한다는 文정부가 통계상으로 드러난 이른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 정작 전체가구의 41.38%를 점하는 자영업·소상공인·실업자를 통계해석에서조차 배제시킴에 놀라지 않을 수 없음. 하루빨리 최저임금 급격인상 등 거꾸로 가는 정책을 버리고, 생산성 제고의 방향으로 경제정책의 대대적인 수정이 요구됨

1. 최저임금인상 효과양극화 심화 관련 가열되는 논란

- 논란의 발단은 통계청 발표(5.24) ‘2018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임
 - 소득하위 20%(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¹⁾이 128만6,700원으로, 전년동기비 8% 감소하여 역대 최대의 감소폭을 보임
 - 반면 소득상위 20%(5분위) 소득은 역대 최대폭으로 늘어나, 5분위/1분위 배율이 5.95배로, 양극화 지수가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악의 양극화 수준을 보임²⁾

1) 2인가구 이상의 명목소득을 의미함.

2)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5분위 소득을 1분위 소득으로 나눈 5분위 배율이 5.95배였음.



자료: 한국경제(2018.6.4.일자 54면)

- 관련 통계작성 이후 처음으로 移轉소득이 勤勞소득을 초과
 - 가계소득 중 정부의 재정지원을 의미하는 이전소득이 사상 최대폭인 月 59만7,000원으로 증가한 반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이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하여 각각 47만3,000원, 18만8,000원이었음
 - 文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완화를 위해 집행한 ‘일자리안정자금’ 등의 대대적 재정지원의 효과가 없음을 반증
- 통계청 발표(5.30) ‘2017년 가계동향조사(지출부문) 결과’도 악화된 양극화의 일단을 적나라하게 투영
 - 지난해, 소득상위 20%의 소비지출이 하위 20% 가구 대비 3.78배였음
 - 가구당 月평균 소비지출은 255만7,000원, 상위20%는 433만1,000원, 하위 20%는 114만6,000원으로 나타남
 -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인 최하위 가구의 평균 소비지출은 110만원으로 나타나, 가계赤字 수준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통계청 발표에 근거, 경제계·학계·언론·정치권에서 文정부의 ‘소득 주도성장’정책에 대한 우려와 비판적 시각 표출 및 정책방향의 대대적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짐
 - 특히, 현실을 외면한 文정부의 대폭적 최저임금인상 정책이 양극화 심화의 주요 표적
- 文대통령의 왜곡된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 효과’ 발언(5.31) 및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BH 경제수석의 기자간담회(6.3)가 관련 논란을 증폭
 - 文대통령은 국가재정전략회의(5.31)에서 “개인 근로소득의 불평등이 개선”

- 되었으며,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 발언하면서, 이른바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표되는 ‘J노믹스’의 수정없는 추진 의지 표명
- 홍장표 BH 경제수석은 기자간담회(6.3)에서 “통계청자료 再분석 결과, 개인 근로소득의 90%가 작년 대비 2.9~8.3%p 증가했음을 확인”했다며, 文대통령의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효과 발언을 뒷받침
- 왜곡된 최저임금인상의 효과에 더해, 我田引水식 통계데이터 再가공 문제가 가미됨으로써, 文정부의 이른바 소득주도성장정책에 대한 불신과 우려가 증폭
- 진보시각을 포함한 대부분의 언론이 전문가들의 우려를 인용하면서 문제점을 지적
 - “의구심 커지는 소득주도 성장”(한경, 6.4)
 - “최저임금, 저소득층에 충격 더 줬다”(서울경제, 5.3)
 - “文대통령 “...불평등 개선”...통계청 “그런자료 없어”(KBS 뉴스, 6.1)
 - “임금노동자만 본다? 청와대의 반쪽짜리 최저임금 분석”(한겨레, 6.3)
 - 恣意的 통계분석 등 ‘통계조작’ 수준의 문제점을 포함한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 관련 논란이 증폭됨

2. ‘조작수준의 我田引水식 통계자료 재가공해석

-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효과가 90%”이며 “개인 근로소득 불평등이 개선”되었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통계자료의 교묘한 재가공을 통한 분석결과에 근거한 명백한 거짓임
- 통계청 발표 ‘가계소득동향’은 조사대상이 ‘個人’이 아닌 ‘家口’
 - 통계자료상 개인의 소득수준을 별도로 분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再가공 용도로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통계도 아님
- 더 큰 문제점은, 통계청 조사자료 중 (不利한) 부분을 제외시키고 재가공한 것을 전체 분석 결과로 호도한 점임
- ‘근로자가구+근로자外 가구’인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한 통계청 자료에서

근로자외가구(자영업자·영세상인·개인경영자 및 은퇴·실직 등 무직자 등 전체 가구의41%에 해당)를 모두 제외시키고, 근로자가구만 대상으로 함

※ 통계청에 의하면, 올해 1.4분기 근로자외 가구 비중은 41.38%로, 2008년 1분기 42.11% 이후 10년만에 최대치이며, 지난 2017년 4분기 대비 4%p 급증

-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 실직자를 제외시키고, 그로 인해 이득 본 대상만으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개인소득이 향상되었고 양극화도 해소”되었다고 BH에서 해석

3. 평가 및 시사점

○ 소득주도성장의 逆說·逆風이 금번 통계청 발표자료로 再확인

- 통계청 발표의 기초 데이터를 보면, 올해 1분기동안 소득하위 20% 저소득층 중 무직자 가구 비중이 57.05로 최근 5년간 최대 폭으로 증가
- 文정부 경제정책의 핵심 대상인 저소득·빈곤층의 살림살이가 오히려 악화된 것이 통계수치로 나타나는 역설적 상황
 - “文대통령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BH 경제수석의 해석은 오히려 근로자 이외의 국민들의 상황이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음을 반증”(성태윤 교수, 중앙일보, 6.4)
 -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고소득자에게만 이득”(소상공인연합회장, 문화일보, 6.4)

○ 我田引水식 통계자료 재가공·해석은 ‘조작’수준의 對국민기만책임

- 논란의 시발점이 된 통계자료를 발표한 통계청조차 文대통령의 “개인 근로소득 불평등 개선” 발언에 대해, 그런 통계자료는 없을뿐 아니라 확인도 어렵다는 입장 표명
- 전체 가구의 41.38%를 점하는 근로자외 가구를 제외한 것을 마치 소자료 분석 결과인 것처럼 해석·공개한 점은 ‘41.38%’국민의 고통을 외면한 비상식적 처사임
 - 저소득·빈곤층을 우선한다는 文정부가 실제 통계 해석에 있어서는 자영업자·소상공인·실직자 등을 제외

- 최저임금의 무리한 인상이 무직자 가구 양산에 결정적 영향임이 최근의 각종 경제·통계자료로 입증
 -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일자리를 유지한 근로자 임금은 올랐지만, 저소득·빈곤층 실업률은 대폭적으로 증가
 - 생산성 향상 없는 최저임금 급속 인상은 취약계층부터 타격이 되는 것은 가장 상식적인 경제논리 중 하나
- 잘못된 정책방향에 관한 많은 지적·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文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고수는 우리 경제의 大재앙이 될 것임
 -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의 정책은 저소득·빈곤층의 고통 유발뿐 아니라, 생산성 저하로 우리 경제의 성장을 저해하는 주된 요인
 - ‘이전소득’수준이 ‘근로소득’을 초과했다는 것은 ‘일자리안정자금’등 국민혈세 투입을 통한 文정부 경제정책의 효과가 없음을 반증
- ‘거꾸로 가는 정책’을 과감히 버리고 생산성 제고의 방향으로 경제정책의 방향 전환이 요구됨
 - 규제혁파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음
 - 악성 규제, 反기업 정책 등으로 생산성이 OECD 회원국 중 27위인 수준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 당장은 文정부의 최저時給 ‘1만원’공약의 철회·완화가 時急
 - 향후 5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인상하되, 업종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해 충격을 완화할 필요
 -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노동생산성, 최저생계비 등 객관적인 경제지표들을 반영하되, 노사자율에 의한 결정을 원칙으로 정부개입 최소화
- 부정확 통계보고를 포함한 잘못된 정책 추진에 대한 책임 규명
 - 25조 원의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3개월 연속 110만 명을 초과하는 실업자를

양산한 文정부의 일자리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이 규명되어야 함

- 무엇보다 청년층과 임시·일용직근로자, 영세자영업 종사자 등 빈곤층 일자리를 대폭 사라지게 한 정책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필요
- 왜곡을 넘어 '조작' 수준의 잘못된 통계를 산출하고 文대통령에게 보고한 분명한 책임소재 필요

II.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 중단과 시사점

작성: 김창배 연구위원 ☎02-6288-0534

지난 5월 21일, 현대차그룹은 주주총회를 취소하고 3월 이후 추진 중인 지배구조 개편안을 철회함. 시장논리를 무시한 文 정부의 재벌개혁이 만들어 낸 참사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음. 우리 기업들의 경영권 방어수단 강화 및 확보의 시급함을 반증한 것임. 다양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文 정부의 무리한 재벌개혁 추진에 대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비판해야하며, 구체적으로는 상법개정시, 차등의결권주식, 포이즌 필 제도 등 우리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경영권 방어수단이 도입되도록 노력해야 함

1.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안 중단

- 올 3월 이후 현대차 그룹은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를 분할·합병하고 현대모비스를 최상위 지배회사로 만드는 개편안을 추진해 왔음
 - 개편안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는 정몽구 회장 부자-존속 모비스-현대차 기아차로 단순해지고, 순환출자 고리도 해소
 - ※ 공정위도 “시장 요구를 반영한 지배구조 개선방안”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
- 하지만 엘리엇 등 헤지펀드 등의 공격으로 난관에 봉착
 - 4월 초 엘리엇이 현대모비스 지분 1.6%를 가진 주주라고 공개하며 분할·합병 반대 의사를 공개 표명한데 이어 외국계 의결권 자문사 ISS와 글래스 루이스도 엘리엇에 동조
 - 엘리엇은 현대모비스와 글로비스의 합병 비율(1대0.61)에 대해 “정 회장 부자에게 유리한 구도”라며 문제 제기

<표1> 현대차 구조 개편안 일지

일자	주요내용
3월 28일	현대차그룹 순환출자 구조 해소방안 발표 공정거래위원회,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선 노력 긍정적” 평가
4월 4일	엘리엇 “현대모비스 현대차 기아차 등 10억달러 규모의 현대차 그룹 보통주 보유 중”
23일	엘리엇 현대차와 현대모비스가 합병해 지주회사가 되는 “현대 가속화 제안” 발표
26일	김상조 위원장, “엘리엇 요구를 따르면 공정거래법 위반” 발언
27일	현대차그룹, 1조원 상당 자사주 소각 계획 발표
5월 2일	현대모비스, 6000억 원 규모 자사주 소각 계획 발표
11일	정의선 부회장, “엘리엇에 흔들리지 않을 것” 선언
15일	ISS,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안 반대 권고
16일	현대차, 세계 최대 의결권사 ISS 의견에 조목조목 반박
17일	국민연금 의결권 자문사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반대 권고
21일	현대차그룹, 현대모비스 주주 총회 일정(29일 예정) 취소 발표

- 현대차 그룹은 약 1조 6천억원 상당의 자사주 소각 계획을 발표하고, ISS 권고의 오류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하는 등 개편안 주총 통과에 노력
- 하지만 국민연금 의결권 자문사인 기업지배구조원 마저 반대 권고를 내면서 2대 주주 국민연금의 협력마저 사실상 요원해짐³⁾

○ 결국 5월 21일, 현대차그룹은 분할·합병 주주총회(29일 예정)를 취소하고 지배구조 개편의 잠정 중단을 발표

2. 시장논리 무시한 ‘文정부 재벌개혁’이 빚은 참사

○ 정부의 무리한 지배구조 개선 압박에 몰린 현대차와 장기 발전계획은 단기 차익을 좇는 엘리엇 같은 투기자본의 희생양이 되어 버림

3) 현대모비스의 외국인 지분율은 48%에 이르고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 부자의 우호 지분이 약 30%에 불과한 상황에서 국민연금(9.8%)의 협조가 어려워진 점은 현대차로서는 결정적 타격

- 정부는 ‘재벌 개혁’을 외치며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압박. 하지만 현대차는 금산 분리 원칙 때문에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길은 사실상 막혀 있었음. 더구나 순환 출자 해소 시점을 ‘주주총회전’으로 특정하는 등 기업에 지배구조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간도 압박
 - 순환출자 해소, 금산분리라는 정부의 가이드 라인에 손발 묶인 현대차의 약점을 간파한 엘리엇은 지주회사 전환 등 과도한 주주환원정책을 요구. 또한 국민연금의 현대차 지원을 차단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적폐로 규정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건에 대해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
 - 현대차는 주주친화 정책의 일환으로 자사주 1조 6천억원의 소각계획을 발표했지만 한껏 높아진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키기는 역부족
 - 결국 이번 현대차가 구조개편안을 중단하면서 순환출자와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 리스크를 해소하고, 계열사 간 효율을 높이려던 현대차의 장기 발전 계획은 좌초 위기
- 이번 현대차 사태를 이념에 치우쳐 시장 논리를 무시한 文 정부의 재벌개혁이 만들어 낸 참사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음
- ※ 강성진 고려대 교수는 “정부의 재벌개혁에 대한 이념과 시장의 이윤 추구 논리가 상충한 결과로 정부가 시장을 이기려고 하면 안 된다”고 지적

3. 헤지펀드의 경영권 위협이 더 거세질 가능성

- 2003년 소버린의 SK 공격, 2005년 칼 아이칸의 KT&G 공격에 이어 엘리엇의 현대차 공격은 정부의 압박에 쫓기는 한국 대기업에 대한 헤지펀드의 공격이 유효할 것임을 입증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아시아지역에서 헤지 펀드의 활동이 점차 활발해 지고 있는 가운데⁴⁾ 정책에 쫓긴 지배구조 개편으로 경영권 방어에 무방비로

4) JP모간(2018) ‘아시아의 주주 행동주의’(Shareholder Activism in Asia)

노출된 한국 대기업은 헤지 펀드의 주요 타겟이 되고 있음

<표2> 외국계 펀드의 경영권 공격 주요 사례

일자	주요내용
1999년	미국계 헤지펀드 타이거펀드, 1999년 SK텔레콤 지분을 6% 이상 사들인 뒤 경영진 교체 요구
2003년	영국계 소버린, SK 지분을 약 15%까지 매입, 2대 주주에 오른 뒤 최태원 회장의 퇴진 요구
2004년	영국계 헤지펀드 헤르메스, 삼성물산을 타겟으로 다른 외국계 투자자와 힘을 합쳐 삼성물산에 우선주 소각요구
2006년	미국계 펀드의 칼 아이칸 회장, 스틸파트너스와 손잡고 지분 6.6%를 사들인 후 KT&G에 자회사 매각 요구

- 더구나 정부는 대주주 의결권 제한장치를 갈수록 늘리면서 헤지펀드에 ‘멍석 깔고 잔칫상’까지 차려주고 있음
 -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 정부가 추진중인 상법 개정안은 대주주의 의결권·경영권을 제약하면서 헤지펀드 공격의 빌미를 강화시키고 있는 셈

<표3> 상법개정안의 주요 문제 조항

조항	예상 부작용
감사위원 분리 선임	1주 1의결권 등 시장원리 훼손
집중투표제 의무화	투기펀드만 악용할 가능성
다중대표소송	주주간 이해상충 소지, 남소리스크
전자투표 의무화	악의적 공격시 투표솔림과 결과 왜곡
자기주식 처분제한	경영권 방어 어려움, 불확실성 가중

4. 시사점 및 대응방안

□ 시사점

- 기업들의 자발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바람직
 - 지금처럼 경영권 보호장치도 없이 지배구조 개선을 일방적으로 압박하면 기업은 헤지펀드의 공격을 막아내기에 급급해지고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 도태되기 십상

- 개별기업의 경제적 상황, 경쟁여건, 미래의 성장가능성을 고려해 지배구조를 자율적으로 선택 가능하게 해야 함. 좋은 지배구조 여부는 ‘정부’가 아니고 ‘시장’이 평가

○ 우리 기업들의 경영권 방어수단 강화 및 확보 시급

- 文정부 들어 논의되는 대부분의 상법 개정 법안은 규제가 지나쳐 해외투기 자본이 악용할 가능성이 높음
 -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해 2월 국회에 제출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에서 “도둑을 잡기 위해 야간통행을 전면 금지하는 격”이라고 지적
- 경영권 위협이 지속되는 한 기업은 배당금, 주가차익 등에 집착하는 투기자본에 좌지우지 되고 그만큼 미래 가치에 대한 과감한 투자나 인재 육성 전략은 제약을 받게 됨

○ 무리한 ‘재벌개혁’ 지속 시 대기업 선택은 한국 탈출뿐

- 글로벌 보호 무역 갈등으로 관세는 점점 높아지고, 국내 법인세율은 글로벌 추세에 역행하고, 고용시장은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확대 등으로 점점 더 경직적이 되어가는 상황
- 여기에 지배구조 개선 압박, 경영권 방어수단 없는 상법개정 등으로 반기업적인 환경이 된다면 굳이 국내에서 비난까지 받아가며 기업할 이유는 없을 것
 - ‘중국제조 2025’, ‘일본재흥전략’, EU의 ‘호라이즌 2020’ 등 세계 각국은 차별화된 혁신정책의 수립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극 대응하고 있음
 - 반면 정부의 지배구조 압박에 우리 대기업은 핵심역량을 경영권 방어에 투입 해야 하는 비정상적인 상황
- 인적자원과 자본의 이동이 상상을 초월할 만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 시대에 기업의 선택은 한국 탈출 뿐

□ 대응방안

- 국회 상임위 등 다양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文정부의 무리한 재벌개혁 추진에 대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비판하고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주도

II.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 중단과 시사점

- 상법개정시, 차등의결권 주식, 포이즌 필 제도 등⁵⁾ 우리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경영권 방어수단을 도입
- 악화되는 대내외 경제 상황을 극복할 핵심 주체는 기업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기업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제언을 지속적으로 선도

5) 차등의결권은 일부 주식에 특별히 많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해 경영권을 보유한 대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제도. 포이즌 필은 시가보다 훨씬 싼 가격에 지분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기존 주주에게 부여해 경영권을 지킬 수 있게 하는 제도

III. 라돈 공포의 확산, 무엇이 문제인가

작성: 장경수 선임연구원 ☎02-6288-0535

국민적 불안과 분노를 확산시키고 있는 라돈 침대 사태는 정부당국의 부실한 초기 대응과 현행법상의 안전관리 사각지대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냄. 이를 개선하기 위해 라돈 침대의 신속한 수거·폐기 및 향후 관리체계 마련, 피해국민에 대한 건강진단 및 보상, 라돈 정책의 관리 일원화가 필요하며, 지자체별 ‘생활방사선 안전관리 공약’을 발표할 필요가 있음

1. 라돈 피해사태 일파만파

- 1급 발암물질인 ‘라돈(Rn)’이 검출된 대진침대 사태가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음
 - 대진침대 일부 제품에서 기준치의 최대 13.7배가 넘는 라돈이 검출⁶⁾
 - ※ 라돈(Rn)은 무색·무취·무미의 자연방사성 기체물질로 흡연에 이어 폐암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센터는 라돈을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음
- 라돈침대 피해자들은 민관합동대책기구를 만들어 생활방사능 안전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
 - 사태가 확산됨에 따라 지난 5월 21일 정부당국은 대진침대 매트리스 6만 여개를 한 달 이내로 전량 수거하겠다고 밝혔지만, 6월 4일까지 수거된량은 고작 6천 여개에 불과
 - 또한 라돈이 검출된 제품에 대한 전수조사, 피해자들에 대한 역학조사 등의 정부 대책 마련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

6) 현재까지 방사선 피폭선량이 기준치(연간 1mSv)를 초과한 제품으로 확인된 것은 그린헬스2, 네오그린헬스, 뉴웨스턴슬리퍼, 모젤, 벨라루체, 웨스턴슬리퍼, 네어그린슬리퍼, 파워그린슬리퍼플래티넘, 프리미엄웨스턴(슬리퍼), 파워트윈플러스 등 21개 제품

- 이번 라돈 침대 사태는 522명의 피해자를 양산한 ‘가습기 살균제 사태’ 등과 유사한 측면이 많음
 - 일련의 가습기살균제 사건, 살충제 계란, 발암물질 생리대 사태 등으로 화학 물질에 대한 불안감이 가진 국민들의 분노는 더 커진 상태
 -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제품이 몇 년간 유통되면서 관리의 허점이 그대로 드러났고, 정부당국의 우왕좌왕하는 초기 대응으로 인해 2차 피해가 확산되고 있음⁷⁾

2. 라돈 사태로 드러난 주요 문제점

① 관리·감독 당국의 부실한 초기 대응

- 사태 초기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많은 제품에서 방사능이 고농도로 나오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함
 - 안전문제를 책임지고 점검하는 국가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 안 되고 오히려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
- 또한 방사능 침대에 대한 원안위 1차 조사결과가 나온지 닷새 만에 말을 바꿔 정부 조사의 신뢰성을 떨어뜨림
 - 지난 5월 10일 1차 조사때는 방사능 농도가 기준치(연간 1mSv) 이내라던 외부피폭량에 대한 입장을 15일 2차 조사에서 기준치의 최대 9.3배라고 뒤집은 것
 - 또한 1, 2차 조사때 조사방식이 서로 달라 관련 제품 검증에 대한 기준 및

7) 라돈 침대 피해 집단소송을 위해 1차 소송위임을 접수한 피해자는 총 2800여명에 달함(5/23 기준).

절차가 애당초 마련되어 있지 않은 허점을 드러냄

- 이낙연 총리는 원안위가 라돈 검출 침대 안정성 발표결과를 닷새 만에 뒤집은 것과 관련해 사과 표명
 - “국민의 안전·안심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오히려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킨 점에 대해 국민들께 정말 송구스러운 일”(국무회의, 5/21)

2 현행법의 안전관리 사각지대

- 현행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선 원안위가 방사성 물질에 대한 ‘안전 관리의무’를 원인물질을 다루는 ‘취급업자’에 부여하고 있음
 - 취급업자는 원안위에 방사성 물질 수출입 신고·유통현황 보고·처리신고 등을 해야 함
- 반면 침대 등 가공제품을 만드는 ‘제조업자’는 안전기준만 지키도록 해 원안위에 방사성 물질을 다루는 업자로 등록할 필요가 없음
 - 방사성 물질 취급업자가 해당 물질을 판매한 이후부터는 제조업자 리스트가 없어 방사성 물질의 흐름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함
 - ※ 신용현 의원(바른미래당)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정안 발의(5/18)
 - ▷ 침대와 같은 가공제품을 만들거나 수출입하는 업자들도 원안위에 방사성 물질 취급 등의 사항을 등록하도록 하는 규정 포함
 - ▷ 또한 법이 정한 전문기관을 통해 유통하려는 가공제품의 안전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조사도 받도록 하고, 그 조사결과를 원안위에 신고토록 의무화하고 있음

3 더 큰 문제는 생활용품 18만종 속 방사능 물질

- 방사능 물질을 내뿜을 가능성이 있는 생활용품은 약 18만종
 - 정부의 생활방사선 안전관리 소홀 및 정보 부족으로 인해 막연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음
- 고농도의 라돈이 호흡을 통해 인체에 들어오면 폐암을 유발시킬 수 있음
 - 라돈이 폐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은 19세기 우라늄 광산 근로자들에

의해서 밝혀졌으며, 라돈과 폐암의 연관성이 입증됨으로써 국제암연구센터는 1988년 라돈을 발암물질로 분류함

- 2010년과 2013년 전국 실내 라돈농도를 조사한 결과 주택은 전체 조사대상 7885가구의 40.9%인 3224가구에서 100베크론(Bq/m³) 이상 검출됐고, 학교는 조사대상 661개교 중 26.8%에서 100베크론(Bq/m³) 이상 검출됨(환경부)⁸⁾
- 또한 2017년 전국 408개 초·중·고교의 실내 라돈농도 조사결과에서도 권고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됨(교육부)
- 미국의 경우 라돈으로 인한 폐암 사망자가 연간 2만1천명 정도로 보고되며, 우리나라의 경우 한 해 폐암 사망자 1만6천명 가운데 라돈으로 인한 사망자가 2천명(약12%) 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됨(국립환경과학원 라돈 실태조사)

○ 원안위는 방사능 물질 유통현황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일상 생활용품에 방사능 물질 사용을 제한하거나 천연 방사능 물질 함유 표시를 의무화하는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발표

- 그러나 부처간 칸막이, 해당 예산 부족 등으로 계획이 원활히 추진될지에 대해서는 미지수

○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80년대부터 체계적인 라돈 실태조사와 저감대책을 수립함

- 미국, 영국, 스웨덴 등은 주거지역의 라돈 기준치를 정해 권고 또는 의무화하고 있으며, 자국 실태에 맞는 라돈 저감방법을 개발해 보급하고 해당비용을 지원하고 있음

8) 실내 라돈농도 권고기준은 WHO 100베크론, 우리나라 200베크론, 미국 148베크론, 스웨덴 200베크론으로 일정 기준을 두고 있음.

3. 정책적 대응방안

- 국민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정부대책 강력 촉구
 - 가습기살균제 사고, 살충제 계란, 발암물질 생리대 사태 등에도 불구하고 생활 안전에 대처하는 정부의 자세와 역량은 전혀 달라진 것이 없음
 - 정부에 라돈 침대의 신속한 수거·폐기 및 향후 확실한 관리체계 마련, 라돈 피해국민을 대상으로 방사선 작업자 수준의 건강진단, 심리치료, 금전적 보상을 강력히 촉구할 필요가 있음
 - 라돈 정책의 관리 일원화 필요
 - 정부당국은 신속한 초기대응, 정확한 대처방향 설정 등 위기관리능력 부족을 어김없이 드러내었고,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데만 급급
 - 현재 라돈 정책은 부처간 칸막이로 인해 원안위, 원자력안전기술원, 환경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국방부 등 여러 기관에서 따로 운영되고 있음
 - 따라서 관련 기관을 모두 포함한 민관합동 대책기구를 만들어 '생활방사선 안전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지자체별 '생활방사선 안전관리 공약' 발표 필요
 - 10대 핵심공약과 더불어 지자체별 '생활방사선 안전관리 공약'도 추가 발표하여 생활안전에 민감한 여성·주부층을 끌어안을 필요가 있음
- ※ 조은희 서초구청장 후보 '생활방사선 안전 4대 공약' 발표(5/18)
- ① 각 통신사와 실내라돈저감협회 등과 협력, 어린이집과 학교에 IoT를 활용한 라돈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추진
 - ② 가정에서 라돈 탐지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라돈 측정기 공유서비스' 실시
 - ③ 어린이집, 경로당 대상 방사선안전을 지키는 라돈보안관 운영
 - ④ 라돈이 검출된 침대 등의 유해생활용품 신속 수거



이슈브리프 ISSUE BRIEF (IB 2018-12)

편집위원회 위원장 : 이종인 편집위원 : 김원표·이윤식 간사 : 김영현·김신의

발행처 : 여의도연구원 TEL : 02.6288.0502 Website : www.ydi.or.kr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8 한양빌딩 4층

발행일 : 2018년 6월 8일 디자인 · 인쇄 : 원기획

〈이슈브리프〉는 각종 현안이슈에 대한 분석과 전망, 대응방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의정활동에 참고·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자유한국당과 여의도연구원의 공식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